

## 중동 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 선제적인 비상 대응으로 대비한다.

- 고용노동부, 7개 지방청 등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 고용·체불상황판 설치, 지역·업종별 고용동향 실시간 점검, 고용유지, 실업·체불 노동자, 청년 등 지원 확대·강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중동 전쟁으로 노동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4월 2일(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노동자 일자리 충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 노동, 산업안전반 및 현장지원반(7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비상대응체계를 지난 3월 30일 신설하고, 매주 회의를 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취약계층의 위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및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용·체불상황판도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은 현재의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행정은 속도’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닌, 신속하고 적극적인 비상 대응을 추진한다.

먼저, 고용상황판 및 현장지원반을 통해 지역·업종별 고용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지표상 위기가 감지되지 않아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자 및 사업주 등과 상시 소통하여 지역 고용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업종별 협·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감지되는 업종 단위 위기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한도 상향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업종에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임금채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 등 5,38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김영훈 장관은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 및 지침 마련, 전달체계 점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노동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전시상황에서 평시의 관행과 문법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인 업무처리 접근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정책기획관<br>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최영범 (044-202-7026) |
|       |                  | 담당자 | 서기관 | 장지훈 (044-202-7027) |
|       |                  |     | 사무관 | 김진영 (044-202-7028) |
|       |                  |     | 사무관 | 차정환 (044-202-7032) |



---

##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모두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 전쟁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일자리와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의 리스크는 외교·안보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유가 불안 등을 야기하며,  
우리 민생경제 전반에 거대한 파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시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경제 전시상황에서는 평시의 관행과 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은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이는 곧 현장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한발 앞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반, 노동반, 산업안전반,  
그리고 7개 지방청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참여하는  
비상대응체제를 즉시 가동합니다.

속도감있는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채불 상황판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및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채불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매주 회의를 통해 중동 전쟁의 영향을 점검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응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비상대응체제를 중심으로  
고용 및 노동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발생시 지역·업종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지원하며,  
실업·임금채불 등 노동자 생계 위협요인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지원, 채불 청산, 생계비 지원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본부와 각 지방관서는  
지방정부, 노사단체, 관련 협회 등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협업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행정은 속도”입니다.  
지표상 위기가 감지되지 않아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징후를 발빠르게 포착하고  
적시에 해법을 내놓는 것,  
그것이 비상대응체제 가동의 본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1일,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5,386억원의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 실업·저소득·체불로부터 노동자 보호,  
고용충격에 가장 취약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예산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써  
적기에 사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 지방관서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및 지침 마련, 전달체제 점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노동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가장 낮은 곳부터,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부터 가시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최우선 책무는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노동자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정의 내일이 달라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 해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